201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개국 700만명 이상의 지지자, 회원, 활동가로 구성되어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대표전화 02-730-4755
©Amnesty International 2019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본 문서의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센스로 허용됩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웹사이트:amnesty.or.kr

201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개요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개요

2019 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으나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1997 년 홍콩 반환 조건에 따라 홍콩 시민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 수위를 높였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억압에 맞서 용맹하게 자유를 수호했다. 수없이 많은 최루탄 발사, 자의적 체포와 육체적 폭력, 구금시설에서의 수감자 학대 등 수개월 동안 지속된 경찰의 폭력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시민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주창하고 책임을 추궁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인도에서는 시민권 부여 심사 과정에서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의 눈부신 불길이 타올랐다.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두 국가 중국과 인도는 소수민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치부하면서 아시아 대륙에 허망하고 고압적인 비전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재교육 수용소'의 참상이 밝혀지면서 트루크계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격화된 중국의 명목상 자치구 신장(新疆)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도했다. 인도에서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은 특별 자치 지위를 박탈당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포위와 통제 조치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에 교회 세 곳과 호텔 세 곳에서 연쇄적으로 폭탄이 터져 250 여 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다수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 무슬림 정서로 인한 폭력적인 사건들이 촉발되었고 정치의 악마화가 시작됐다. 이미 많은 독재자가 존재하는 아시아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Gotabaya Rajapaksa 가 11 월 차기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의 당선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내분이 중재될 것이라는 가망은 희미해졌다.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Duterte 대통령이 선포한 잔인한 '마약과의 전쟁'은 국제적으로 미미한 비판을 받고 그대로 진행됐다.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권력을 더욱더 장악하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많은 국가에서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며 시민 공간 civic space 을 제약했다. 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시류에 편승하듯 낡은 억압의 방식을 존속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가혹한 법을 도입하는 수단을 취했다.

아시아 전역의 국가 정부는 자신들의 억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외세'의 노리개로 칭하며, 좋게 말하면 '순진무구'하고 나쁘게 말하면 '반역적'인 사람들이라고 악마화했다. 이들은 고도화된 소셜미디어 작전을 사용해 지독한 비방을 일삼고 확산시켰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의 책무성을 외면하고 대부분의 경우 기후변화의 참해 앞에서도 침묵한다.

정부에 저항하기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아시아 지역 청년들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비폭력주의 파슈툰 보호 운동 지지자들이 기소 및 구금되고 시위가 금지된 이후에도 수만 명이 강제 실종과 비사법처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수천 명이 기후파업에 참여하며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더불어 평화 행진 참여자들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평생 겪어 온 자국 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중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라오스에서는 부실한 댐 건설 관련 시위가 열렸다.

시위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노력도 결실을 맺었다. 스리랑카에서는 변호사들과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사형 집행의 재개를 성공적으로 막았다. 대만에서는 많은 국민이 성소수자 평등을 위해 싸웠으며 5 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후변화와 공해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이끌어냈고, 몰디브 대법원은 종교 강경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원 판사 두 명을 임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17 년 미얀마군의 만행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했고, 이어 감비아가 미얀마를 집단학살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로힝야를 위한 정의가 실현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관련국이 자행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기로 한 판결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막 지나간 2019 년에 이어 다가온 한 해도 다사다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청년 운동가들이 꾸준히 보여주었듯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희망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국가별 인권 현황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 문재인

2019년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 인권의 역사적 진전이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유엔과 여러 유엔 회원국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유지되고 있다. 합의된 성인 남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이 법으로 인해 군대 내 LGBTI는 차별과 낙인에 시달리며 폭력,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다.

배경

유스Youth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인권의제에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스 기후행동 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협에 정부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에서 전 세계적 기후 파업 운동의 중심에 섰다. 유스의 목소리에 부응한 약 5,500명의 시민은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동참했으며, 서울 도심에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개최 20년이 되는 올해 역대 최대인 약 15만 명의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폭력 행사로 열리지 못한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안전하게 개최되었다. 하지만 제 3회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해운대구청의 반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 인권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차별을 제도화했으며 군대의 조직적 편견을 강화했다.[1] 범죄화는 게이 남성, 양성애자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과 논바이너리 등 기존의 성별규범에 따르지 않는 군인들이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들로부터 따돌림, 괴롭힘, 차별, 폭력을 겪지 않고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19년 말, 헌법재판소에서는 본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는 2002년 이후 4번째 심리다.

한국 정부에서는 성별 정정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은 트랜스젠더의 사생활권, 건강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요건을 담고 있다. 지침은 신청자가 성별재지정수술을 받고, 미성년의 자녀가 없어야 하며, 혼인상태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성별 정정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 성별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성별이 변경된 신분증을 받을 수 없다. 이 신분증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이며 다른 공식 서류를 구비하거나 필수 서비스 접근, 구직, 거주 공간 구매 등을 위해 필요하다. 신분증의 사진이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차별을 겪거나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이

[1] 대한민국: 침묵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2019년 6월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0529/2019)

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128개 인권 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여성인권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매우 제한적인 대한민국의 낙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2] 그간 낙태를 한 여성과 소녀, 낙태를 집도하는 의사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수감될 수 있었다.

2016년 12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및 전쟁 중 있었던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 피해자 11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협약 및 합의에 의해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은 2019년 3월 한국 지방 법원에서 재개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1월 해당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생존자와 피해자들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 및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에서는 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적인 인정과 책임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받았던 한 유력 정치인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2018년 서지현 검사가 자신이 당한 업무 조직 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며 촉발된 한국 미투#MeToo 운동에 한 획을 그었다.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단과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증언을 우선시하고 판사들이 사회의 맥락과 성 평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이주여성은 사회와 가정에서 차별을 마주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베트남 여성이 겪은 가정 폭력 문제와 탈북 여성의 아사 추정 사건 등 이주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을 다시 조명했고 이에 따라 차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2019년 말까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한국정부에 주문했다.[3] 지난 12월, 입법부는 병역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근거 없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양심, 사상, 종교, 믿음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당 법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여, 21개월 또는 18개월 군복무와 비교해 불균형하게 긴 복무 기간을 제도화했다. 또한 대체복무제의 행정 절차가 군 당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입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원의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 법원들은 여전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현재 3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다른 3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항소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연말에 1,879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승리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2019년 4월 11일)

[3] 대한민국: 한국의 대체복무제 법안,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2019년 5월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0352/2019)

사형제도

지난 12월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세 번째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에 8번째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제출했다.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지난 20년간 발의된 7번의 특별법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정부는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 역시 기권하는 등 사형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

2018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당시 결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원수: 김정은
내각 총리: 김재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이동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계속해서 엄격하게 제한했다. 일상생활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통제와 빈번한 노력동원 압박은 북한 사람들의 인권 실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몇몇 건의 공개처형 집행 사례가 보도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거나 가혹한 환경에 처했다. 북한 정부는 제 3차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지속해서 확대했다.[1] 그러나 북한 당국은 여전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2]

배경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자력갱생"과 "사회주의"를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했다. 중국, 미국, 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하여 핵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협상에서 인권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3] 북한이 5월부터 12월까지 적어도 13차례에 걸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유엔과 개별 국가들의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제재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활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재의 결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7월, 북한 당국은 농업과 축산업에서의 심각한 생산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제안한 쌀 5만 톤 지원을 거절했다.

사형

북한에서 성폭행, 마약류 범죄, "미신행위" 등의 혐의를 받은 이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집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 당국은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응하고자 2012년부터 대부분의 공개처형을 중단했었다. 5월에 열린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관련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처형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

알려진 정치범수용소 4곳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그 존재를 부인했다.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강제노동 그리고 열악한 식사를 포함한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

---

[1]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고향 북한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국제앰네스티 블로그, 2019년 8월 8일)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4/9712/2019)
[3]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잔혹한 인권상황 호도해서는 안 돼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2019년 2월 25일)

다고 알려졌다. 수감자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며 자국을 떠날 자유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 재판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됐다. 이들은 가족이나 변호사를 접견할 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수감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 또는 "연좌제"로 인해 외딴 산간지역에 강제격리 당했다.

북한 당국은 호주 국적의 유학생 알렉 시글리를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 혐의로 구금했다가 일주일 만에 추방했다. 2018년, 북한 정부는 핵 협상이 시작되자 3명의 미국 국적자를 석방했다. 하지만 한국인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 탈북인 3명 등 6명의 한국인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강제실종

북한 정부는 한국전쟁 포로들에 관한 정확한 생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납치피해자 한국인, 일본인과 기타 외국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1969년 납치된 항공기에 올랐다가 비자발적으로 북한에 도착한 후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황 원의 생사 또한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4]

이동의 자유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북한에서 사전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보안원 등 국가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북한 정부는 사람들의 이동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분증을 새로 교체했다. 등록된 거주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새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난 것으로 간주됐다. 국경, 비무장지대DMZ, 중요 군사시설 인근 지역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

한국의 통일부는 2019년 9월까지 북한 주민 771명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11월 한국에 도착한 북한 선원 2명은 살인 혐의를 받아 한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됐다. 많은 북한 사람이 증명서류 없이 중국에 거주 중이며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했다. 북한 당국은 북중 접경지대의 통제를 강화했다. 북한군은 철조망 등 각종 물리적 장애물을 설치했고 이 지역 거주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또한 신분증명서 확인과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수색을 강화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된 북한 사람 23명의 강제송환 위험을 우려하는 4건의 긴급 청원서를 중국 정부에 보냈다.

북한을 떠난 여성들은 중국 남성과의 강제결혼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해있다.

표현의 자유

북한 당국은 북한 사람들과 외부세계와의 정보교환을 엄격히 통제했다. 모든 통신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았다. 소수 엘리트 지배층을 제외한 보통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국제 전화 서비스를 사용

---

[4] 대한민국: TV 프로듀서, 50년째 북한에 억류되다 / 황원, 2019년 1월 29일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9751/2019)

할 수 없었다.

외국 출판물, 영상, 기타 미디어 자료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한국산 미디어 자료는 특별 관리 대상이며, 범법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사형의 위험에 처했다.

북한 당국은 수입 휴대전화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서 강화했고 모든 외부 통신을 통제하기 위해 전파 방해 기술을 사용했다. 중국 접경지역에 사는 다수의 사람은 중국에서 밀수한 휴대전화로 중국 통신망에 접속해 한국과 다른 국가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다.

식량권

5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10년 내 가장 저조한 농작물 수확량으로 인해 북한 전체 인구의 40%인 1천 10만 명이 일시적이긴 하나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일부 개혁이 도입되긴 했으나 농업 생산 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당·정부·군대 종사자와 평양 시민만이 공공 배급의 혜택을 누렸다. 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특히 식량 불안의 위험에 처했다.

201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